

# G-Welfare Weekly Repor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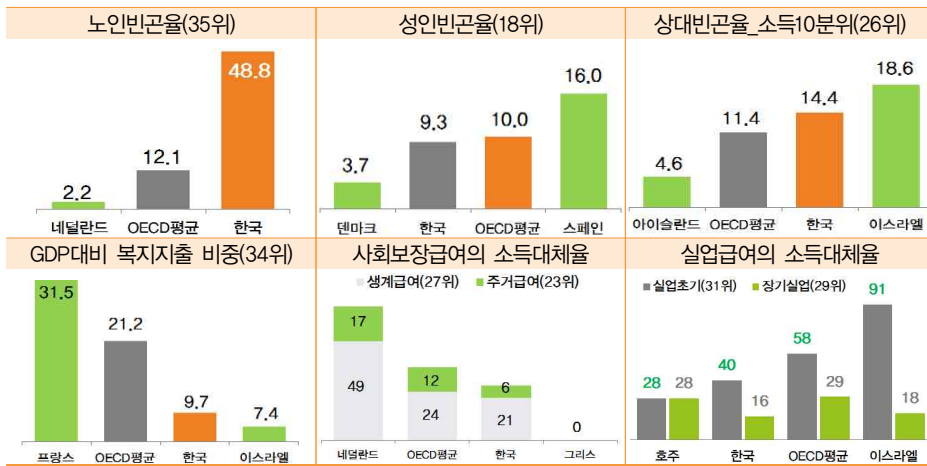
## 01

### 중앙정부 정책동향

#### 1. OECD 지표로 보는 한국의 빈곤

##### 01 주요 내용

- 10월 17일은 국제연합(UN)이 공인한 '세계 빈곤퇴치의 날'로, 절대빈곤과 기아 근절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
  - 우리나라도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득보장정책을 점차 확대해, 최근에는 소득 보장분야 지출이 보건복지분야 총 지출액의 절반을 차지
- 그러나 지난 5일 OECD가 발간한 'OECD 사회지표\*' 2016년판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은 35개국 중 노인빈곤율(35위),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(34위)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



\*전체 지표는 일반 지표(소득·인구), 자족성고용·실업, 평등성빈곤율·복지지출, 건강성자살률·보건지출, 사회통합성실업만족도·장부신뢰도·사회안전망 구성

- 대부분의 국가가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감소하는데 비해, 우리나라는 노인층 빈곤율이 무려 48.8%에 달하는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구조
  - 우리나라 25~65세 성인빈곤율은 평균 수준(18위), 18세 미만 청년빈곤율은 양호 수준(5위)
  - 반면 노인빈곤율은 34위 호주(25.7%)보다 두 배가량 높은 압도적 차이로 최하위를 기록하여, 한국사회 노인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
- 우리나라는 또한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으며, 이는 사회보장급여 및 실업급여의 낮은 소득대체율과도 연동
  - 사회보장급여의 소득대체율\*\*은 생계급여 21%(27위), 주거급여 6%(23위)로 나타났으며, 실업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실업초기(1개월째) 40%(31위), 장기실업(60개월째) 16%(29위)에 불과

\*\*인가구 기준

##### 02 시사점

- 소득보장제도 설계 시 우리나라의 빈곤 특성을 반영하고, 제도의 포괄성과 충분성을 확대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개편이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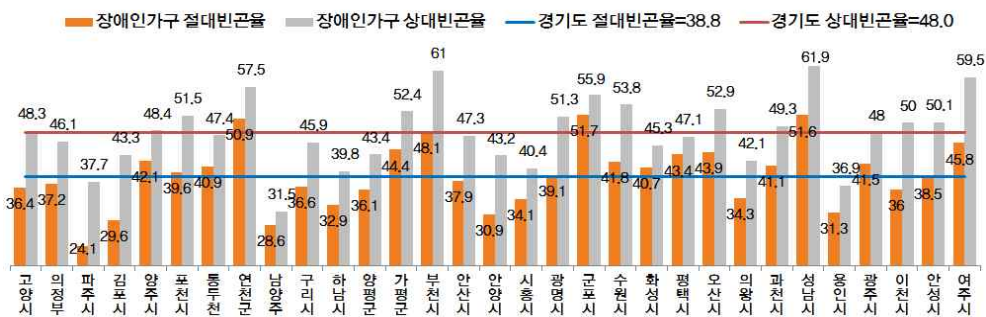
## 2. 경기도 장애인가구, 절반이 빈곤 상태

### 01 주요 내용

- 장애인 인구 증가와 함께 장애인 고령화도 진행되고 있는데, 2014년 기준 전체 장애인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으로\* 2011년(38.8%)보다 11.6% 증가
  - 장애인 1인 가구도 2014년 24.3%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한 상황으로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장애인 1인 가구도 증가할 전망
  - 고령 및 1인 가구 장애인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소득 및 돌봄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
- 경기복지재단(2016) 조사에 따르면, 경기도 장애인가구의 소득은 월 21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(338만원)의 62.1%에 불과
  - 공적이전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 현금수당\*\* 수급률(21.4%)은 전국평균(26.9%)에도 못미치고, 울산(19.7%) 다음으로 낮은 수준
- 낮은 소득 및 현금수당 수급율로 인해 장애인가구의 절반(48.0%)은 상대빈곤상태에 있으며, 절대빈곤상황이지만 수급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33,700가구에 달함
  - 장애인가구의 시군 간 상대빈곤율 차이가 두 배(성남 61.9%, 남양주 31.5%)로 심각하며
  -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(월세공과금연체, 끼니거름, 의료서비스이용 못함 등)에 지장을 경험한 가구는 18.8%(전체 6.3%)이고 이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6.4%에 불과

\*2014년 기준  
43.3% (전체인구 중 노인비중은 12.7%)

\*\*장애수당, 장애이동수당, 장애연금 포함



-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보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은 40.1%이고,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25.5%로 높지 않으나, 향후 이용의향은 53.3%
  -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“없다” 고 응답한 비율이 69.2%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, 1인 장애인 가구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,
  - 그 다음은 배우자, 부모, 자녀 등 가족에 의한 돌봄이 30.8%로 대부분 사적 관계자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- 돌봄서비스 비용 부담은 월 15.6만원으로 월소득의 9.3% 수준으로 유럽 복지국가의 권고 수준인 4~7% 보다 높으며, 실제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고 응답한 가구도 54.0%

### 02 경기도 시사점

- 장애인구의 고령화 지속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공공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및 돌봄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 필요
  - 돌봄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역의 돌봄서비스 인프라 확충하여 서비스 공급 확대 및 서비스 접근성 개선
  - 장애인가구의 빈곤상태가 가장 열악한 만큼 돌봄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장애관련 현금수당제 개선 등 소득보장제도 강화 필요

# 02 사도/사군 복지정책 동향 분석

## 1. 장애인 돌봄욕구 충족률, 성남 최고·의왕 최저

올해 경기복지재단이 실시 중인 「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」 기초자료를 토대로 도내 31개 시군별 장애인 돌봄욕구 실태를 비교

- 현재 주 돌봄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의 이용률은 14.1%(2015년 1~2급 대상 기준)로 전국 12.1%보다 높지만 이 중 63.6%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음\*
  - 정부는 작년 6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급을 기존 1~2급에서 3급까지 확대했다고는 하나 대폭적인 예산 증액없이 서비스 혜택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음
  - 현 이용인원을 3급까지 확대 적용한 이용률은 7.9%로 기존 이용률 대비 50%수준까지 하락
- 경기복지재단(2016) 조사 결과 도내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공급현황을 보면,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낮은 시군일수록 서비스 필요욕구가 높게 나타남
  - 의왕의 경우 장애인 돌봄서비스 이용률은 가장 낮은 반면 돌봄서비스 필요율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, 성남·안산·안성·수원·광명은 돌봄서비스 이용률이 필요율보다 높게 나타남

\*경기복지재단 (2015)

〈표 1〉 도내 시군별 장애인 돌봄서비스 실태

지역	이용률 (A)	필요율 (B)	충족률 (A/B*100)	지역	이용률 (A)	필요율 (B)	충족률 (A/B*100)
경 기	25.5	40.1	63.6	오 산	16.6	32.4	51.2
수 원	37.1	25.0	148.4	하 남	18.9	32.4	58.3
성 남	52.7	25.7	205.0	의 왕	2.4	76.1	3.2
부 천	31.8	44.9	70.8	여 주	29.6	35.7	82.9
용 인	13.2	47.9	27.6	양 평	9.9	24.7	40.1
안 산	49.9	26.8	186.1	과 천	17.3	53.9	32.1
안 양	23.6	35.9	65.7	고 양	18.3	69.6	26.3
평 택	16.2	50.3	32.2	남양주	18.2	52.5	34.7
시 흥	30.0	37.5	80.0	의정부	17.6	71.4	24.6
화 성	16.2	36.8	44.0	파 주	29.6	36.2	81.8
광 명	39.8	35.8	111.2	구 리	29.3	33.9	86.4
군 포	33.6	33.9	99.1	양 주	4.6	30.8	14.9
광 주	16.2	34.9	46.4	포 천	31.2	35.6	87.6
김 포	23.3	27.4	85.0	동두천	32.9	34.7	94.8
이 천	10.1	47.7	21.2	가 평	17.4	23.4	74.4
안 성	33.1	19.1	173.3	연 천	23.7	29.0	81.7

(단위 : %)

- 장애인 돌봄시간은 안양이 12시간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가 3.2시간으로 가장 낮으며, 돌봄 필요시간은 오산이 14.4시간으로 가장 많고 의정부가 3.8시간으로 가장 낮음
  - 실제 돌봄시간과 돌봄필요시간 간 격차는 오산(5.5시간)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
- 장애인의 서비스 욕구, 생활환경, 사회참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장애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필요

## 2. 재단 주요행사 안내

사업명	주요내용
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연구 [도민 공청회]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 시 : 10. 22.(토) 14:00</li> <li>• 장 소 :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다산홀</li> <li>• 내 용 : 경기도 복지기준선 연구 추진경과 보고 및 영역별 토의 진행</li> <li>• 참 여 :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 약 200명 ※ 문의 : 267-9364</li> </ul>
2016 제2차 복지경기포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일 시 : 10. 25.(화) 14:00</li> <li>• 장 소 :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</li> <li>• 주 제 : 한국·미국·일본 사회복지 미래와 전망</li> <li>• 대 상 : 사회복지 전문가 및 종사자 ※ 문의 : 267-9377</li> </ul>

※ 정정 안내  
 지난 호 시군동향 (표 1)의 '마치료 율'을 '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'로 정정합니다

# 03 FACT CHECK

## 빈곤은 소득의 결핍을 의미하는가?

- 빈곤이 소득의 결핍이란 차원으로 이해되는 것은 일반적 경향이며(강신욱 외, 2015)\*, 실제 빈곤인구 계측이나 사회보장급여 대상 선정 시 대부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음
  -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소득이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매하거나 자산을 축적해 미래에 대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때 사회구성원 간 개념적 합의가 용이한데다,
  - 소득의 속성 상 계량화가 가능해 측정이나 비교, 그리고 제도평가가 용이하기 때문임
- 그러나 근본적으로 빈곤을 개념규정하고 과학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(김은주, 2015)\*\*이나 빈곤 개념의 지나친 단순성에 대한 비판도 오랫동안 지속
  - 빈곤은 사회 안에서 통용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이며, 빈곤을 소득의 결핍으로만 측정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몰이해에 가까움
  - 실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득빈곤가구와 비소득적 결핍가구의 구성은 약 50%만이 일치\*\*\*
- 다소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빈곤개념과 달리, 빈곤 자체는 건강, 주거, 고용, 교육, 나이가 시간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생존과 자기실현을 제약하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실존
- 사회의 빈곤위험과 빈곤층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현실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비소득적 차원까지 고려한 보다 광의의 빈곤개념이 필요
  - 최근 실존하는 빈곤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으로 다차원적 빈곤 개념이 인정받기 시작. 다만 이 개념 역시 무엇이 '다차원'을 구성하는 지에 대한 모호성은 향후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

\*"주요 소득보장 정책의 효과성 평가 연구"(강신욱 외, 2015)

\*\*"다차원 빈곤지표로 측정된 한국의 아동빈곤"(김은주, 2015)

\*\*\*"빈곤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: 소득빈곤에서 다차원적 빈곤으로"(김경혜, 2011)

# 04 통계로 보는 복지

## 장애인의 소득보장 실태\*



자료: 국회입법조사처(2016)

- 한국의 GDP대비 장애인복지 지출은 0.49%로, OECD 평균(2.19%)의 약 1/4 수준에 불과
  - 덴마크(4.71%) · 스웨덴(4.28%) 등 북유럽권은 GDP 대비 장애인복지 지출 수준이 높고, 영미권은 OECD 평균 수준이며, 한국을 비롯한 터키(0%) · 멕시코(0.01%)는 지출 수준이 낮음
  - 장애인복지지출은 다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할 수 있는데, 대부분의 국가에서 현금급여 비중이 좀 더 높게 나타남
-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현금급여 종류는 장애인연금 · 산재급여 · 상병보상연금 · 기타급여임
- 한국은 현금급여에서 장애인연금의 비중이 30.0%로 OECD 평균(60.9%)의 절반에 불과
  - 현금급여 중 산재급여 비중이 높고 장애인연금의 비중은 적어 기본생활보장을 위해 장애인연금 확대가 필요

\*2011년 기준